

세월호 유가족, 대검찰청에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전 정부 핵심 인사 전면 수사해야”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 의약속국민연대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최 측은 “검찰이 지난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해양경찰 구조지휘세력과 특조위 조사

방해세력 기소에 그쳤다”며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의 몸통 격인 국가 책임자를 비롯한 핵심 세력에는 손도 못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의 초동 대응 문제만 밝히고 해경만 처벌한다면 온전한 진상규명이라 할 수 없다”며 “집물 원인과 구조 방기, 진상규명 방해로 밝혀지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 고발인, 법률대리인단 등 5만여명은 총 78명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고 말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거론한 ‘총 78명의 세월호 참사 범죄혐의자’는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와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유가족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관련자 7인, 세월호참사 현장 구조와 지휘세력 32인,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 방해 세력 20인이다.

유가족들은 “오늘(2일)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검찰청 앞 피켓팅 시위, 국민단원서 작성, 시민대회 주최로 전면 재수사와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이슬 기자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이틀째...일일 공급량 779만개

전날보다 86만여개 줄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시행 2일째인 6월 2일 공적 판매 마스크 778만7000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일 865만6000개보다 86만9000개 소폭 감소한 숫자다.

이날 일일 공급량 778만7000개 중 61만6000개는 의료기관과 경북도,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책적 목적으로 우선 공급됐다. 의료기관 33만개, 정책적 목적 28만6000개이다.

나머지 717만1000개는 일반 소비자 구매가 가능한 물량이다. 약국은 701만3000개, 서울 경기 지역 이외 농협하나로마트 8만8000개, 대구 청도 및 읍면 소재 우체국 7만개를 공급 받았다.

특히 이날은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2일째로 누구나 공적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1주 1인 3개 수량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나 등교 학생을 위해 2002년 이후 출생자는 1주 1인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대리구매자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동거인 포함 모든 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신봉우 기자

해남, 대지진 전조?...“아니다” 결론

기상청, 국립대 지구환경 교수·연구원과 회의결과 발표 “28일간 75번 ‘흔들’ 규명 위해 추가 연구 필요” 주장도

기상청이 최근 전남 해남 인근에서 80회 가량 연속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라며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1일 전국 국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회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 지었다.

회의에는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광희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이준기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조창수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연구본부) 등이 참석했다.

기상청이 파악한 지진은 4월26일부터 5월말까지 총 75회다. 미소지진을 포함한 횟수로, 가장 센 리히터 규모는 5월3일 밤 10시7분경 발생한 3.1 지진(최대 진도 3)이다.

연구·분석을 맡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와 지진화산연구과는 규모 2.0 이상 지진에 대한 단층운동을 분석했고, 동남동-서북서 또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움직임이 한반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이라는 게 연구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국내 진앙(지진 발생 깊이)이 통상 5~15km인데 비해 해남일대 지진 진앙이 20km인 것은 △지각두께 변화 △주변과 다른 온도조건 △구성물질 등 요인이 작용했다고도 한목소리 냈다.

다만 해남 연속지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부단층구조 파악 연구가 필요하며 연속지진 체계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및 기상청의 입장이다.

오유나 기자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타판매처 보다 낮게 팔아야”...가격 결정권 제한 ‘지위 남용’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가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면서 전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이를 위해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

다. 이후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갖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엄중 제제한 최초의 사례”라며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유료 회원 범죄단체가입죄...오늘 영장심사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이 3일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씨(29)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두번째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사례다.

앞서 1일 경찰은 남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유료방 회원들은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몰래하고 이들의 성착취물 제작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유족, 경기도교육감 상대 소송...법원 “차별 아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故) 김조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제자들을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교원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단원고 교사들 중 정규 교원

만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했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6년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씨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김씨의 유족은 “기간제 교원 역시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데도, 적용을 배제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당시 순직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